

세월호 침몰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비판적 담론분석(CDA)을 적용한 세월호 담론 경쟁*

김영옥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함승경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과 박사과정***

담론경쟁 패러다임은 PR 커뮤니케이션의 분석 단위를 조직을 넘어서 사회문제로 확장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면서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담론 경쟁을 통해 공론의 장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이 연구는 비판적 담론 분석의 틀로 세월호 침몰 사건의 담론경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적극적인 담론적 실천을 형성한 담론은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진상규명 담론이었는데, 꼬리자르기, 특별법, 기억 담론으로 재구성되면서 세월호 침몰 사건의 의미를 형성해 갔다. 각 시기별로 경쟁하는 담론들은 구조 수습기에는 유가족과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언론이 구성한 참사담론과 정부와 보수언론이 생산한 사고담론이 대립했다. 원인책임 규명기는 유가족과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언론의 진상규명 담론과 정부와 보수언론의 보상담론이 경쟁했다. 대책 수립기에는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기억담론과 보수언론의 피로감 담론이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 공방을 벌였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을 받은 시민들은 구조 수습기에는 진보성향을 가지고 현실 개혁을 주장하는 유가족의 참사 담론을 지지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경과되면서 보상 담론, 피로감 담론 등 과실책임주의와 개인주의 이데올로기 등을 수용하면서 정부와 보수 언론의 담론으로 헤게모니 중심이 이동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판적 PR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이론적인 함의를 서술했다.

KEYWORDS 세월호, 비판적 담론 분석, 담론경쟁, 참사, 사고

* 이 연구는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38236)

** Corresponding Author: 52 Ewhay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03760. kimyw@ewha.ac.kr, 82-2-3277-2237

*** Second Author: hamseungkyung@gmail.com.

서론 및 문제제기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중요한 전제는 사회적 권력과 지배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다(van Dijk, 1993). 다른 조직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할 때 권력은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설득을 통해 순응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비판적 담론 분석은 통제를 정당화하고 사회적 질서와 불평등을 순응시키는 담론 전략에 관심을 갖는다. 비판적 담론 분석의 시작은 언어와 언어사용을 사회적 실천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사회적 실천으로서 담론은 사회 구조의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사회적 실재를 구성하기도하는 변증법적 관계를 갖고 있다(Fairclough, 1992). 즉 담론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실천으로서 권력 관계를 형성유지 발전시키고, 권력 관계의 다양한 지위에서 의미 작용을 구성하고 자연화시키고 변화시킨다. 결국 비판적 담론 분석은 담론과 사회 변동간의 권력 관계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PR 커뮤니케이션은 담론 개념을 수용하면서 조직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확장을 모색한다(Heath, Motion & Leitch, 2010 ; Roper, 2005). 담론 경쟁에서는 PR 커뮤니케이션의 중심 개념인 조직과 공중 그리고 관계의 의미가 변화된다. 주류 이론에서 조직과 공중은 주체와 객체로서 역할이 구분되었지만, 조직 중심 접근에서 객체화되었던 공중이 담론의 주체가 되어 공론장에 참여한다(Leitch & Motion, 2010). 공론장에서는 담론을 통해서 해석의 권한을 가진 주체들이 담론을 주도하게 되고(Gordon & Pellegrin, 2008), 권력은 사회를 정의

하는 능력, 담론으로 의미 공유를 이끌어 내는 능력에 의해 이동된다. 체계 이론에서 권력이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면, 담론 경쟁에서 권력은 가변적이다(Leitch & Motion, 2010). 사회적 약자들도 공론장에서 공동의 의미를 형성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현실을 정의하면서 헤게모니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담론 경쟁은 담론의 능동성을 통해 조직 중심 PR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로 지적되는 권력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비판적 담론 분석을 적용해서 PR 커뮤니케이션의 담론 경쟁 패러다임으로 세월호 침몰 사건을 분석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담론들을 생산한 ‘담론적 사건’이다. ‘담론적 사건’으로서 세월호 침몰 사건은 정부의 무능과 무분별한 기업 활동이 복합된 ‘참사’로 규정되기도 하고 수확여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라고도 정의되는 등 담론들 간 경쟁을 통해 세월호 침몰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생산해냈다. 이 연구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의 담론, 정부의 담론 그리고 언론의 담론이 공론장에서 헤게모니를 얻기 위해 벌이는 의미 생산의 경쟁을 비판적 담론 분석의 틀로 분석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한 담론과 이 담론이 변화시키는 사회적 변화 내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와 권력 관계를 비판적으로 탐색했다. 이를 통해 PR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합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봤다.

비판적 담론 분석이 언어학적 접근을 근거로 텍스트 분석에서 출발하지만, 텍스트 분석에 앞서 이데올로기적 해석에 치우쳐, 이데올로기적 동기를 갖는 인상주의적 해석에 머물러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Shin, 2011).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페어클라우(Fairclough, 1992, 1995, 2003)가 제안한 담론의 세 가지 층위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사용했다. 언어학적 기반의 텍스트 분석을 시작으로 문화이론에서 접합 개념을 도입해서 담론적 실천을 파악하고, 툴민(Toulmin)의 논증 구조를 적용해 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드러내 고자 했다. 이러한 다층적 분석을 통해 세월호를 둘러싼 담론들의 사회적 영향과 한계를 탐색해 보았다.

문헌연구

비판적 담론분석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은 담론을 실천으로 간주한다(Fairclough, 1992, 1995, 2003), 담론은 재현의 방식일 뿐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행하는 행위의 방식이며 사회적 구조와 변증법적 관계가 있다고 전제한다. 담론이 사회적 구조에 의해 제한되고 형성되지만 담론도 규범, 관습, 관계, 제도 등 담론을 구성하거나 제약하는 사회적 구조의 모든 영역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담론은 사회 구조와 같이 거시적 영역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를 구성하거나 지식과 신념 체계를 구성하는 데도 기여한다.

담론과 사회 변동간의 관계에 주목한 페어클로우

(Fairclough, 1992, 1995, 2003)는 텍스트와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는 통합적 시각으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시도했다. 그가 제시한 분석틀에서 담론은 텍스트(text), 담론적 실천(discourse practice), 사회적 실천(sociocultural practice)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페어클라우가 제안한 담론의 세 층위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분석적 틀이라기보다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담론을 정치와 이데올로기적 실천으로 확장시켜 기술하고 해석하는 개념적 틀이라고 볼 수 있다.

텍스트는 세계를 재현하고 사회적 사건의 참여자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텍스트의 부분들을 결속력 있게 연결하는 기능을 갖는다(Halliday, 1978). 그러나 비판적 담론 분석 접근에서는 텍스트의 기능보다는 의미에 집중한다. 텍스트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휘, 문법, 결속, 텍스트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휘 분석의 초점은 단어선택과 선택된 단어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의미를 분석하고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논쟁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Fairclough, 1992). 어휘의 의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어 간의 관계 그리고 단어와 의미간의 관계가 헤게모니의 형식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담론 분석의 두 번째 층위인 담론적 실천은 텍스트의 생산, 분배, 소비 과정과 관련된다(Fairclough, 1992, 1995, 2003).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은 사회인 지적 제약을 받고, 담론의 질서와 사회적 구조, 규범, 관습 등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자원에 의해 제한되며 사회적 실천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사회인 지적 접근은 담론에 따라 텍스트 해석에 미치는 사회적 맥락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간

과했다는 한계가 있다(Fairclough, 1992). 이런 배경에서 비판적 담론 분석은 담론에 대한 사회결정론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담론과 사회 구조 간의 변증법적 관계에 주목한다. 사회 구조와 담론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파악함에 있어 상호텍스트성(Kristeva, 1986)은 유용한 개념인데, 특정 텍스트들이 이전 텍스트들을 변형시키고, 현존 관습들을 재구조화하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담론으로 형성된다. 상호텍스트성은 담론의 변화를 설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텍스트들이 이질적이고 다양성을 가진 복합체이면서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담론의 상호텍스트성 분석은 담론 참여자들이 어떻게 담론의 이질성과 모순을 줄이면서 고 권력 관계를 형성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담론의 사회적 실천은 담론을 이데올로기의 실천으로 정의한다(Fairclough, 1992, 1995). 페어클라우(Fairclough, 1992)는 이데올로기의 과정적, 변형적, 유동적 측면을 조명하면서 이데올로기를 사회적 구조가 아닌 담론적 사건에 위치시킨다. 이런 접근은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를 관습의 형식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데올로기를 구조의 속성으로 파악하는 것과 대조되는 입장인데, 이데올로기의 단순한 재생산보다는 변형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의 실천으로서 담론에 대한 접근도 담론 관습보다는 담론의 생산을 통제하고 선별하고 조직화하고 재분배하는 담론 질서(Foucault, 1970/2011)의 우위를 인정하는 관점이다. 이런 담론의 관점은 헤게모니 개념과 조화되며 담론적 변화에 주목하며 권력관계를 이론화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헤게모니는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관통하는 리더십으로, 경제적으로 정의되는 계급 전체로서 사회에 대한 권력이다(Fairclough, 1992). 헤게모니는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획득되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헤게모니를 얻기 위해서는 연합을 구성하거나 균열시키기 위한 경쟁(struggles)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헤게모니 경쟁 개념은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텍스트들이 이전 텍스트나 관습과 접합되거나 상호텍스트성을 형성한다는 담론적 관점에 부응한다.

비판적 담론분석은 담론 자체가 권력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인이자 헤게모니 경쟁이 벌어지는 무형적 공간이 된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비판적 담론 분석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 담론과 권력불평등 관계를 규명하고, 담론을 구조이면서 과정으로 정의하며, 담론 간의 갈등을 통해 사회적 역사적 변화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담론이 언어화된 상징적 매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그 자체로서 사회적 실천의 형태이며, 담론을 통해 얻어지는 권력이 실질적 이해관계와 지배, 담론의 생산, 유포, 변형에 따른 힘의 불균등한 분배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van Dijk, 1993).

담론경쟁

PR 커뮤니케이션의 주류 이론인 균형 모델은 사회의 다양한 주체 세력들이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상호 견제를 통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다고 전제하지만, 이런 다원주의적 관점은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의 불균형을 간과하고 사회

적 약자의 주장이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받았다(Roper, 2005). 균형이론에서 조직과 공중의 균형적인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쌍방향의 윤리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판적 관점에서는 쌍방향 균형과 윤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본질도 권력을 가진 조직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지 위한 헤게모니 전략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더 나아가 비판이론은 조직중심의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조직의 목표를 위해 조직을 옹호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위해 공익을 간과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합의를 막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Kim & Park, 2006).

이런 비판적 관점을 수용하고 PR 커뮤니케이션이 조직 체계 중심의 기능에서 벗어나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들이 중 하나가 담론 경쟁 패러다임이다. 담론경쟁 패러다임에서는 조직을 하버마스의 체계와 생활세계 구분을 도입해, 체계조직, 생활세계조직, 체계와 생활세계의 혼합조직으로 구분하며, 조직 개념을 확장시킨다(Leitch & Neilson, 2001). 체계조직은 기업, 정부 등과 같은 조직이며, 생활세계 조직은 시민 조직이나 지역 사회 조직 등 공론의 장에서 담론을 주도하는 시민들의 조직으로, 이러한 시민조직이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게 되면 혼합형태의 조직이 된다. 확장된 조직의 개념은 조직과 공중의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서 공중의 의미도 변화시킨다(Leitch & Motion, 2010). 조직과 다른 조직은 서로의 공중이 되기도 하며, 조직 뿐 아니라 공중도 공론의 장에서 여론을 형성해가며 상대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정의된다. 필연적으로 조직과 공중의 개념 변화는 관계 변화로 연결된다. 상황에 따라 설정된 조직과 공중은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대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PR 커뮤니케이션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아니라 의미 공유를 위한 대등한 관계로 PR 커뮤니케이션 주체와 PR 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Heath, 2006).

담론경쟁에서 권력은 헤게모니를 고착화시키는 수단(Durham, 2005)이 아니라 의미론적 측면에서 의미를 공동창조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해나가는 관계 측면의 공동 자산이다. 즉 권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며 담론을 통해 권력은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의미를 형성해나가며(Burke, 1969, 1973), 의미 해석의 권한을 가진 주체가 권력을 갖고 현실을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한다(Gordon & Pellegrin, 2008). 이러한 과정에서 담론은 의미론적 차원에서 권력을 순환시키는 매개체가 되며, 담론 주체는 담론을 통해 권력을 창조, 유지,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담론경쟁 패러다임에서 PR 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차원에서 조직에게 유리한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 담론 전략을 수행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모션과 위버(Motion & Weaver, 2005)는 유전자 변형에 대한 Life Science Network의 캠페인 담론 분석을 통해 조직의 담론이 사회 문화적 맥락과 연결되어 권력을 얻어가는 과정을 추적했다. Life Science Network는 유전자 변형이 없는 곡물이 병충해를 확산시켜 유전자 변형 곡물까지 위협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캠페인에 담았다. 모션과 위버(Motion & Weaver, 2005)는

이 캠페인을 유전자 변형이 없는 곡물에 환경 위험 담론을 접합시키고, 유전자 변형 곡물에서 환경 위험 담론을 탈접합시켜 유전자 변형 곡물 재배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헤게모니를 형성하고자 한 RR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분석했다. 물론 담론 경쟁 패러다임에서 유전자 변형이 없는 곡물을 지지하는 조직이나 공중은 반대 담론을 형성해 경쟁하게 된다.

사회적 차원에서 담론을 통한 권력의 가변성 논의는 PR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판의 대표적인 주제였던 옹호(advocacy) 행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Kim, 2012). 비판적 관점에서는 조직의 옹호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문제가 되어왔지만, 담론경쟁에서는 옹호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옹호행위가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가가 중요해진다(Burkart, 1994). 설득의 의미도 불균형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석되지 않고 의미공유를 형성하기 위한 담론 주체들의 정당한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인정된다(Heath, 2001). 즉, 권력을 가진 기업이 PR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비리와 관련하여 조직을 옹호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시민단체가 PR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이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진실성과 개방성 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담론경쟁은 비판적인 접근의 정치 경제학적인 권력 불균형에 대한 비판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담론을 통한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권력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간주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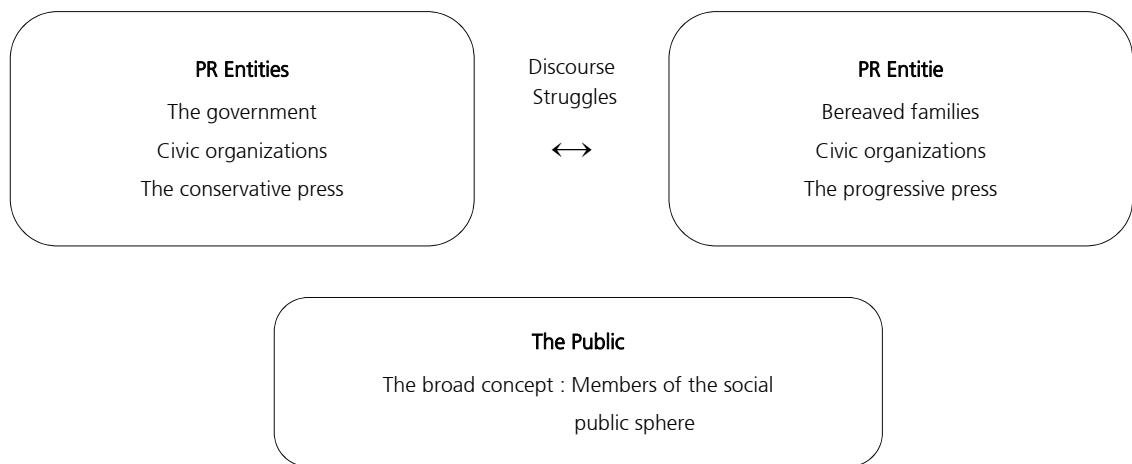
담론을 통해 의미를 공유하고 창조하기 위해서

는 내부적 합의 측면에서 담론 자체의 경쟁력, 다른 담론들과의 경쟁력, 그리고 외부 맥락과의 경쟁력이 필요하다. 담론 경쟁력에서 청중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추론 기술로 정의되는 논증(Perelman & Olbrechts, 1958/1969)은 중요한 개념이다. 담론 경쟁을 통해 절대적 가치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담론들이 논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때 합리적 논증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통해 상대를 설득시키고 여론의 지지를 얻게 된다. 논증을 도식화하고 비평하는 데 적합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는 툴민(Toulmin)의 논증 모델은 논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제들의 기능을 밝히고, 비판에 대해 어떻게 적절한 논증을 제시하고 분석하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다(Oh, 2007).

툴민이 제안한 논증의 구성 요소는 주장(claim), 근거(data), 논거(warrant), 반박(rebuttal) 등이다(Toulmin, 1956). 툴민의 논증은 근거(data)를 기반으로 논거(warrant)를 통해 근거와 논거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claim)이 제기되는 실증적 논증(substantial argument)이다(Toulmin, 1956). 실증적 논증은 분석적 논증과 달리 현실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고, 현실 또는 경험적 사실을 통해 논거의 논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근거-주장을 정당화하는 잠재적이고 함축적인 논거를 식별함으로써 논증 과정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분석할 수 있다(Lee, 2003). 이런 이유로 실증적 논증인 툴민의 논증 분석 모델은 공론장에서 벌어지는 담론 경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현실과 경험적 사실을 통해 구성되는 담론에서 근거와 주장을 잇는 논거를 분석하고, 담론 경쟁자들이 상대방 담론에서 정당화되지 않은 채 당연한

Table1 PR Communication Paradigm as Discourse Struggles

| | |
|-----------------------------|--|
| PR Communication | Engaging in meaning competition activities in the context of society which outcomes agendas focusing on the organization |
| Organization and the Public | Entities that enter into meaning competition to form public support in a public sphere |
| Method of Analysis | Text analyses using texts themselves, discourse practices and sociocultural practices |
| Perspective on Power | Actively accepting perspectives of power imbalance and the possibilities of changes in power obtained through discursive justification |

**Figure 1** The Sewol Ferry Incident Arguments Examined through the Paradigms of Discourse Struggles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논거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틀민의 논증 모델 분석을 통해 논거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논거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세월호 침몰 사건 일지와 선행 연구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진도군 조도면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세월호 조난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도 배가 완전

히 침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동대응 실패와 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객실에 남아있던 승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4월 18일 실종자 가족들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현장과 달랐다는 것이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월호 탑승 인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었다.

정부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대통령은 4월 29일 국무회의 중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초동대응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고 관피아를 척결하는 등 국가 개조를 통해 세월호의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6월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8월 30일까지 역대 최장 기간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청문회 증인 채택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고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6월 30일부터 7월 11까지 2주 동안 22개 기관에게 보고를 받은 것이 그나마 성과로 평가된다(NocutNews, 2014.8.29).

2014년 5월 22일 전국의 6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를 발족해, 5월 25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 두 달도 안 되어 350만 명이 넘는 참여를 이끌었다(National countermeasure committee of Sewol disaster, 2014). 7월 15일 가족대책위는 이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입법을 청원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유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했지만 세 차례 이루어진 여당과 야당의 합의안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과 농성에 돌입했다. 특별법 정국이 지속되자 일부 단체들은 유가족들의 단식이 거짓이고, 중복 단체들의 선동이라는 주장을 하며 폭식 투쟁 등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보이기도 했다. 10월 31일 유가족과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장 18개월까지 활동하고, 위원장을 유가족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인사가 맞는다는 내용의 특별법 안을 합의했다(KBS, 2014.11.3). 이후 실

종자 수색이 종료되었고 11월 18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해체되었다.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학계 연구는 사건의 직접적 원인과 사회 구조적 원인 조명(Kim & Kim, 2014; Rho, 2015),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둘러싼 쟁점 분석(Kang, 2014; Kim, 2015; Hong, 2014), 세월호 침몰 사건의 정치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Park, 2015),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회적 성찰에 대한 탐구(Kim, 2014) 등 세월호 침몰 사건의 쟁점들이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분석되고 해석되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드러난 국가 위기관리 실패에 대해 노진철(Rho, 2015)은 위기관리의 확실성을 높이려는 국가의 개입이 조직들 간의 연계성과 복잡성을 증가시켜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안전 담론과 함께 위기관리의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 개편 등의 기술적인 안전대책을 내놓지만, 재난관리체계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국가에 대한 낮은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사회 담론을 앞세운 사회 통제 강화보다 위기 관리에 대한 국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원인은 무리한 증축과 급변침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로 결론지어졌고, 승객구조의 실패는 진도 VTS 관제 담당자들의 부실관제와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과실 치사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세월호 침몰과 구조에서 발생한 의혹들에 대해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

해 강성현(Kang, 2014)은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진상규명의 의미를 불법을 넘어서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반드시 규명하여야 할 구조와 역사를 밝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이유로 세 차례 거부 끝에 합의된 10월 31일 특별법 합의안은 유가족이 요구한 진실-정의-안전 모델에서 후퇴한 진실-화해 모델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하고 진상규명을 통한 정의수립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언급이 있는 후부터 유가족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특별법 공방이 이어졌다. 진상조사 위원회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하는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이에 대해 김종서(Kim, 2015)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사법체계 충돌이라는 것이 허구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이 없으므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게 부여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적 결단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특별법이 첨예한 당파적 주제가 된 것은 세월호 침몰 사건이 정치화된 것을 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종희(Park, 2015)는 세월호 침몰 사건이 정치화 된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재난 발생의 책임은 청해진과 관리감독 기관에게 돌릴 수 있지만, 재난 대응의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부의 책임 아래 놓인다는 점이 참사의 정치화를 촉발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사 이후 진행된 두 번의 선거가 세월호 참사의 정치화를 가속화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정치화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이 정치적 소

수자가 되어 일부 언론과 극우 단체의 정치적 공격을 받아야했고, 선거에 패배한 야당은 사태 해결에 대한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종엽(Kim, 2014)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이 전체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일상적 대화 그리고 감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이데올로기적 개입이 비롯됐다고 분석하면서 참사를 교통사고로 규정하는 것은 특유성을 부인하려는 것으로 고유성의 부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주장했다.

연구문제

이 연구는 2014년 4월 16일부터 2014년 11월 18일까지 정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언론사들이 구성한 담론들의 경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언론의 담론을 분석하고, 담론적 실천을 통한 담론의 변화를 밝혀내고 담론들이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해석한다. 더 나아가 담론 간 경쟁을 통해, 세월호 침몰 사건의 담론에 내재한 이데올로기를 식별하고 권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세월호 침몰 사건 담론들의 텍스트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연구문제 2: 세월호 침몰 사건 담론들은 담론적 실천을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며 권력 관계는 어떻게 형성

되는가?

• 연구문제 3: 공론장에서 경쟁하는 담론들의 논증구조는 어떠한가? 이데올로기의 경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방법

분석대상과 분석기간

분석기간은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해체된 2014년 11월 18일까지이다. 분석을 위해 216일을 3개 시기로 구분했다. ① 첫 번째 시기는 ‘구조 수습기’로 4월 16일부터 5월 19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까지로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과 구조와 희생자 수습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② 두 번째 시기는 ‘원인·책임 규명기’로 5월 20일부터 검찰의 해운비리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유병언 사망이 확인된 7월 22일까지이다. 이 시기는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에 대한 재판과 세월호 침몰 사건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7월 21일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7월 22일 유병언의 사망이 확인되면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직접적 원인 규명이 일단락되고 이후부터 특별법 국면으로 전환되어 사후대책이 논의되었다. 3)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7월 23일부터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해체된 11월 18일까지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었던 시기로 ‘대책수립기’로 명명했다. 이 시기

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유가족과 여야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희생자 수습이 종료되었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해체되었다.

이 연구는 분석 대상으로 PR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를 유가족과 시민단체, 정부, 보수언론 그리고 진보언론을 선택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재난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 논의와 실천을 이어간 세월호 사건의 대표적 PR 커뮤니케이션 주체이다.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구성한 담론들의 대항담론을 생산한 정부도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둘러싼 PR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주체이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도 세월호 침몰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고 사후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담론을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보도하고 수용자의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담론을 생산하는 기구(Baek, 2015), 세월호 침몰 사건의 공론의 장 기능을 수행했는데, 언론사가 PR 커뮤니케이션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담론을 구성해 공중과 관계를 맺는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언론사들도 PR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상정했다. 특히 언론의 경우 담론 텍스트 분석을 위해 일간지로 한정했고, 일간지 중에서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했다. 일반적으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신문 경영의 시장주의 전략을 채택하며 보수적인 보도시각을 유지하고, 한겨레와 경향 신문은 보

Table 2 The Classification of the Analysis Periods

| | | |
|---|------------|--|
| The Rescue Period | 2014.4.16 | Sinking of the Sewol Ferry |
| | 2014.5.6 | The Sewol Tragedy Victims' Family Committee consisted. The signature-collecting campaign began |
| | 2014.5.19 | President Park addressed to the Nation on the Sewol Ferry disaster |
| The Responsibility Investigation Period | 2014.7.9. | Filing the April 16 Special Act with the committee for the families,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National Countermeasure Committee |
| | 2014.7.22 | The police confirm a Sewol owner's death |
| The Counter- Measure Period | 2014.10.31 | Parties agree on the Sewol bill |
| | 2014.11.18 | Disbanding the government-level Accident Relief Headquarter |

수적 정권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Lee & Ko, 2009). 이 연구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성향을 유지하는 일간지 중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기록한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했는데(ABC, 2013), 이는 언론사들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세월호 담론의 특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담론의 텍스트 분석을 위한 자료는 정부 측 자료, 유가족과 시민단체 자료, 그리고 언론 자료이다. 자료 수집은 ① 정부 측 자료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무회의 브리핑 자료 7건과 대통령 담화 1건,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3건과 검찰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5건, 그리고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료 21건 등 총37건이다. ② 시민단체와 유가족 자료는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Sewolho416.org)의 입장 자료 142건을 수집했다. 호소문, 보도자료, 기자회견, 성명, 논평 등이 포함되었다. ③ 언론사 자료는 사실이 수집되었다. 언론사의 기사 유형 중 사실은

언론사의 논조를 반영하는 대표적 기사 유형이다. 언론사의 사실은 텍스트가 생성되는 제반 사회적 맥락 속에서 특정 사안이나 이슈에 대한 이념, 즉 그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수용자들에게 이념을 생산하고 강화시킨다(Kim & Kang, 2011). 주관적 가치가 개입된 사실은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이슈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데,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의 교환은 상호이해와 설득을 통해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Park, 2006). 논쟁적 사안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다양한 의미해석들의 공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의 역할은 담론의 기능과 맞닿아있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사의 사실을 담론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자료 수집은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사실 섹션에서 '세월호'를 키워드로 검색했다. 조선일보 전체 133개 사실 중 선거와 총리 임명과 같은 정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제외하고 100건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한겨레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해

107건 사실이 수집되었다. 언론사 분석 자료는 총 207건이다.

담론 텍스트 분석

텍스트 분석은 ① 수집된 개별 자료의 제목과 주장에 근거해 시기별로 주요 단어를 선별하고 ② 주요 단어들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를 정리하고 ③ 빈도수가 높게 사용된 단어와 텍스트의 주장을 연관지어 주요 주장을 정리하고 ④ 사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체계적 논리로서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주장들로 부터 담론을 도출했다. ⑤ 마지막으로 각 시기별 개별 담론 주체들이 구성한 담론들의 이항대립 분석을 시도했다. 기호학적 관점에서 이항대립은 심층구조의 기본을 이루며 의미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다(Kim, 1994). 이항대립 분석을 통해 상호배타적인 담론을 전제로 의미를 형성하는 개별 담론들의 의미작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대립되는 담론들의 계열체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전체 담론들 간의 잠재적 구도를 분석해 담론 경쟁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분석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텍스트 분석과정을 예를 들면,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2014년 5월 13일 기자회견 자료의 제목은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긴급 요구 5개항'이다. 먼저 ① 제목 아래 제기된 5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이 요구 사항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들을 선별한다. 선별된 단어들은 '수색', '원인규명', '책임', '참여', '인권침해' 등이다. ② 개별 자료에서 선별된 단어들은 담론 주체별, 시기별로 정리되고, 수집된 단어들 중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을 선별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분석된 구조

수습기의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텍스트에서 빈도수가 높은 주요 단어는 '언론', '표현의 자유', '구조', '진상규명', '안전', '책임', '특별법', '참사', '청와대'이다. ③ 시기별로 빈도수가 높은 단어와 자료의 제목과 주장의 의미적 연결을 분석해 주요 주장을 정리하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한다', '정부가 추모 집회를 탄압한다',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안전사회를 만들자', '정부는 무능했고 무책임했다'로 분석된다. ④ 정리된 주장들 속에서 사회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주장들을 담론으로 도출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구조 수습기의 유가족과 시민들이 구성한 담론은 '편파보도', '집회 자유', '진상규명', '책임', '안전사회', '참사' 담론으로 분석되었다. ⑤ 마지막으로 유가족과 시민단체, 정부, 언론사들이 구성한 담론들을 이항 대립으로 분석했다.

담론적 실천 분석

페어클로우(Fairclough, 1992)는 담론적 실천을 다양한 장르와 담론들의 결합인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설명했다. 이 연구에서는 페어클로우가 제시한 담론적 실천의 상호텍스트성을 파악하기 위해 담론들의 접합, 탈접합을 분석했다. 홀(Hall, 1996)은 접합(articulation)이 두 개의 다른 요소를 서로 통일시킬 수 있는 연결 형태라고 했다. 담론들이 접합되어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생산되고 다양한 권력 관계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실천은 담론의 정치적 실천으로 권력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키며, 이데올로기 작용으로 세계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변화시킨

다(Fairclough, 1992, 1995, & 2003). 이 연구의 담론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의 분석은 각 시기별 담론 간 혹은 담론과 비담론 간 탈접합을 통해 구성된 담론들의 과정을 파악하고 재구성된 담론들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와 권력 관계를 해석했다.

경쟁하는 담론들의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 분석

사회적 실천으로서 경쟁하는 담론들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기 위해 툴민(Toulmin, 1958)의 논증 분석 모델을 적용했다. ① 먼저 경쟁하는 담론을 분석한다. ② 경쟁하는 담론들을 툴민의 논증모델의 요소에 따라 근거(data), 논거(warrant), 주장(claim)의 요소로 분석한다. 분석 요소가 되는 주장(claim)은 각 담론 주체들이 주장하는 가장 포괄적인 진술이다. 자료 제목이나 소제목으로 드러난 경우가 대부분 주요 주장이다. 근거(data)는 주장이 기초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사실, 증거를 의미한다. 논거(warrant)는 근거와 주장 사이를 잇는 논리적 연결로서, 근거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주장과 같은 결론을 내리거나 주장을 할 수 있는 명제들이다(Toulmin, 1958). ③ 다음 단계로 대립되는 담론의 논증 구조에서 주장과 근거를 연결하는 논거를 통해 담론에 내재한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관으로서 이데올로기를 식별한다. ④ 경쟁하는 담론 중 사회적 지지를 획득해 헤게모니를 갖게 된 담론과 그에 내재한 이데올로기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해석한다.

분석결과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담론들의 텍스트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구조 수습기〉 담론

구조 수습기의 텍스트에 나타난 주요 단어들을 분석한 결과 PR 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텍스트에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 구조, 진상규명, 안전, 책임, 특별법 등이 분석되었고, 정부의 텍스트에서는 사고, 안전, 경제, 책임, 재난, 희생 등이 파악되었다. 진보 언론의 사실에서는 구조, 사고, 책임, 해경 등의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보수 언론의 사실에서는 사고, 참사, 안전, 책임, 청해진 등의 단어 사용 빈도가 높게 파악되었다. 각 텍스트들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된 단어와 주장들의 연결성을 고려하고 사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체계적인 논리로서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담론들을 분석한 결과,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담론, 진상규명 담론, 그리고 안전사회 담론을 구성했고, 정부는 사고 담론, 국가개조 담론, 유병언 처벌 담론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언론은 참사 담론, 진상규명 담론, 공동체속죄 담론을 구성했고, 보수 언론의 사고 담론, 관피아 담론, 선동 담론을 생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R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 유가족과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규정하는 것에서 담론을 통해 대립했다. 시민단체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기업의 비정상적 이윤 추구, 민관유착, 국가재난대응체제의 부재가 복합된 참사로 규정했다. 반면 정부는 무리한 증축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과 해경의 초동대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정의했다. 시민단체가 구성한 참사 담론은 죽음의 문화를 내재한 자본주의와 재난에서 한 명의 국민도 구하지 못하고 작동이 멈춘 국가 체제를 비판한 거대 담론인 반면 정부의 사고 담론은 세월호 침몰 사건의 정황을 사건 발생과 구조 부실 그리고 민관유착 등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한 미시 담론의 성격을 띤다.

세월호 침몰 사건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유가족과 정부의 대립은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도 이어졌는데, 정부는 국가개조로 시민단체는 안전사회 담론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국가개조 담론은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주장하는 담론이다. 반면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사회 전체에 생명과 존엄이 보장되는 안전사회를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가자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지향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언론의 담론은 대립하기도 했고,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구성된 담론들도 있었다.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 모두에서 초동대응 실패를 묻는 해경무능 담론을 구성했고 구조를 기다리며 여객선 내부에 있던 학생들을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어른들의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 속죄 담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대립하는 양상도 보였는데, 진보언론은 유가족과 시민단체와 함께 참사담론을 구성했고, 보수 언론은 정부와 함께 사고담론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인책임 규명기〉 담론

이 시기 유가족 텍스트에 나타난 주요 단어는 특별법, 진상규명, 성역, 책임, 대통령 등이었고, 정부의 텍스트에는 재난, 안전, 지원, 사고, 보상 등이 주요 단어로 발견되었다. 한편 진보 언론의 사설에서는 진상규명, 국정조사, 피해, 해경 등이 등장했고, 보수 언론은 안전, 청와대, 공무원, 참사, 사고 등이 나타났다. 빈도수 높은 주요 단어와 주장들과의 결속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담론들을 도출한 결과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PR 주체로서 특별법, 국가책임, 꼬리자르기(민관유착), 시민탄압 담론들을 통해 상대인 정부와 대립하면서 공중의 지지를 얻고자했고, 정부는 유병언 처벌, 보상, 해경무능, 경제 혁신 담론들을 대개로 PR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했다. 한편 진보 언론은 유가족과 시민단체와 같이 진상규명, 특별법 담론을 제기했으며, 공영방송 침몰 담론과 같은 언론 분야에 특화된 담론을 생산하였다. 반면 보수 언론은 정부와 같이 유병언 처벌 담론을 생산했고,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는 국정조사파행, 무너진 공조직 담론들을 구성했다.

원인책임 규명기에 PR 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전 시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 이에 부응해 이 연구 분석틀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른 PR 커뮤니케이션 주체인 민주화를 요구하는 변호사 모임은 5월 29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17대 과제 중간 보고서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 해양사고의 무대책,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고 세월호 사건의 종결을 시도하기 위해 보상담론과 유병언 처벌 담론으로 맞대응했다. 유병언 처벌 담론의 생산 논리는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인 청해진 해운의 비정상적 이윤추구가 재무구조의 취약에서 비롯됐고, 이것은 청해진의 실제 소유주인 유병언의 횡령과 배임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병언의 재산을 환수해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자는 것이다. 보수 언론은 유병언을 검거하지 못하는 검찰을 비난하고, 유병언의 개인 행적 추적과 은닉재산 환수까지 낱낱이 보도하면서 유병언처벌 담론을 전방위로 확산시켰다.

〈사후 대책기〉 담론

사후 대책기 PR 커뮤니케이션 주체인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텍스트에 나타난 주요 단어는 책임, 수사·기소권, 합의, 단식 등이었고, 정부의 경우는 유병언, 책임, 재산, 비리, 해경 등이었다. 한편, 진보 언론은 유병언, 수사·기소권, 특별법, 단식 등을 많이 사용했고, 보수 언론은 수사, 합의, 특별법, 막말 등을 많이 사용했다. 주요 단어와 주장들과 텍스트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통해 담론을 분석한 결과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불통, 수사·기소권, 시민연대, 기억 담론을 구성했고, 정부는 재산환수, 반수사기소권 담론을 구성했다. 한편, 진보언론은 유가족과 시민단체와 같이 수사·기소권 담론을 생산했으며, 심판, 세월호 표류, 막말 담론 등을 구성해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유가족과 정부 간의 갈등을 조명했다. 반면 보수 언론은 정부와 같이 반수사기소권을 생산했고, 진보 언론과 함께 막

말 담론을 구성해 유가족을 배려하지 못하는 정치권을 비판했고, 폭행, 피로감 담론을 제기했다.

사후 대책기에 정부와 시민단체의 담론 대립의 각도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특별법 담론이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법률 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 견해와 입장을 모으는 합의 과정을 통해 인식의 공유와 변화를 만들어갈 것을 강조했다(Park, 2014). 특별법 담론의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특별법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체로 인식했지만, 정부 여당은 피해자가 처벌 권한을 갖는 것은 자력구제로 사법체계와 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특별법 담론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사회 변화를 요구한 담론이라면 기억담론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시민연대를 호소했다. 그러나 특별법 정국으로 유가족과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자 일부 시민단체는 유가족을 민생법안을 불모로 잡고 사회적 피로를 형성하는 집단으로 몰아붙였고, 이에 대해 보수언론은 피로감 담론을 생산해 유가족을 정치적 소수자화하면서, 시민들과의 연대를 흔들었다.

Table 3 Discourses on the Sinking of Sewol Ferry and Binary Opposition in Discourses

| Period | Sector | Bereaved Families/Civic Organizations | Government | Progressive Media | Conservative Media |
|---|-------------------|--|--|--|---|
| Rescue Period (4/16-5/19) | Main words | Freedom of expression, Rescue, Media, Investigating the truth Security, Responsibility, Special law on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Blue House | Accident, Security, Economy, Responsibility, Disaster, Sacrifice, Renovation, Government officials, Reformation, The Coast Guard | Rescue, Accident, Responsibility, The national maritime police, Disaster, Security, Apology, Media (Disaster)Response, Missing people | Accident, Disaster, Security, Responsibility, Chonghaejin, The Coast Guard, Missing people, Government officials, Apology, Politics |
| | Discourse | Biased report, Freedom (of having a rally) Truth ascertainment, Government's responsibility Safe society, Disaster, Citizen participation, Tail cropping | Government's responsibility, Accident, The Coast Guard dismantlement, The Nation reformation, Economy renovation, Punishment on Yoo Byung-eun | Disaster, Company 's Corruption, The Coast Guard's Irresponsibility, Truth ascertainment, Biased report, Community's atonement, Tail cropping, | Accident, Eradicating corrupted official, The Coast Guard's irresponsibility, Community's atonement, |
| | Binary Opposition | Disaster : Accident Safe Society : The nation reformation | | | |
| Responsibility Investigation Period (5/20-7/22) | Main Words | Special law, Responsibility, Truth ascertainment, Sanctuary, President, Bereaved families, Signature, Police Rescue, Regulation, Citizen | Disaster, Safety, Support, Accident, Compensation, Corruption, Economy, The Coast Guard, Yoo Byung-eun, Right to indemnity | Truth ascertainment, Inspection of administration, Damage, Disaster, The Coast Guard, Police, Responsibility, Broadcasting, The Blue House, Bereaved families, Yoo Byung-eun | Safety, The Blue House, The government official, Disaster, Accident,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Responsibility, The Coast Guard, The prosecution, Inspection of administration |
| | Discourse | Disaster, Special law, Government's responsibility, A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Citizen suppression | Accident, Compensation, The Coast Guard's incapacities, Economy renovation, Punishment on Yoo Byung-eun, A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 Truth ascertainment, Special law, Responsibility avoidance, Founded KBS, Illegal inspection | Punishment on Yoo Byung-eun, Crippling inspection of administration, Founded official organizations, Prosecutors' incapacities |
| | Binary Opposition | Truth ascertainment : Compensation Government's responsibility : Punishment on Yoo Byung-eun | | | |

| Period | Sector | Bereaved Families/Civic Organizations | Government | Progressive Media | Conservative Media |
|-------------------------------------|-------------------|---|---|--|--|
| Counter-measure Period (7/23-11/18) | Main Words | Responsibility, People, Agreement, Gwanghwamun, Right of accusation and investigation, Hunger strike, National Assembly, Special law, Truth ascertainment, Safety | Yoo Byung-eun, Responsibility, Asset, Corruption, The coast guard, Embezzlement, Undin, Imprisonment, Search, Suspicion | Yoo Byung-eun, Right of accusation, Right of investigation, Special law, By-election, Hunger strike, Negotiation, Bereaved families, Disaster, National Assembly | Investigation, Agreement, Special law, Rights of accusation and investigation, Conflict, Agreement, Rough words, Outside protest, Relief drivers |
| | Discourse | Miscommunication, Rights of accusation and investigation, Solidarity of the citizens, Remembrance, Renegotiation | Redemption of assets, Judicial system | Rights of accusation and inspection, Judgement on the Sewol ferry, Drifting special law, Republic of rough words | Anti-rights of accusation and inspection Republic of rough words, Violating the relief driver, Fatigue by the Sewol ferry, Conflict |
| | Binary opposition | Special law : Anti-Rights of accusation and inspection Remembrance : Fatigue | | | |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담론들은 담론적 실천을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담론적 실천을 분석하기 위해 시기별로 담론들의 접합, 탈접합을 분석했고, 사회적 실천은 담론적 실천을 통해 재구성된 담론들의 헤게모니와 권력관계를 해석했다. 원인 책임규명기의 담론적 실천은 개별 담론 주체들이 구성한 담론들의 접합되면서 상호텍스트성을 형성한 반면, 사후대책기는 주체를 달리하는 담론들 간의 상호텍스트성을 통해 담론적 실천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담론 주체별로 분석해보면 유가족과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 언론은 공론장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세월호 침몰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담론을 통해 공중

들과 커뮤니케이션했고, 정부는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강조하는 정부책임을 유병언 처벌과 보상으로 대체하려는 담론을 생산해 여론의 지지를 얻고자 했다. 보수언론은 담보 상태였던 특별법 정국에 대한 여론을 피로감으로 상징화하면서 여론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갔다.

구조 수습기

①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담론

진상규명(시민단체, 진보언론) - 국가책임(시민단체, 정부)
→ 꼬리자르기 담론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둘러싼 담론 경쟁의 대표적인 PR 커뮤니케이션 주체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진상규명 담론을 구성해 세월호 침몰 시작부터 연구 분석의 종료 기간인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해산하는 시점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과 상호 작용하면서 꼬리자르기, 특별법, 기억 담론으로 변화시켜왔다. 구조 수습기에는 진상규명 담론이 꼬리자르기 담론으로 재구성되었다. 꼬리자르기 담론은 진상규명 담론에 국가책임 담론을 탈접합시킨 것으로, PR주체인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정부의 책임 회피를 질타한 담론이다. 세월호 선원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해경과 정부 재난 컨트롤타워의 법적 책임도 선원들에 비해 가볍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컨트롤 타워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선장과 선원에 대한 수사 결과만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몸통 보호를 위한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상대적으로 열세인 정부와의 권력 관계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헤게모니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담론을 재구성하면서 공중의 지지를 호소했다.

선장을 비롯해 승객들의 대피에 책임 있는 선원들이 무책임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알기를 원한다. 검찰이 선장과 선원에 대한 수사결과만 재빨리 발표하는 것이 구조에 실패한 국가의 책임을 선원들에게만 모두 돌리는 ‘꼬리자르기’가 아닐까 우려스럽다.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던 검찰이 해경과 해수부, 안행부와 청와

대 등 소위 ‘컨트롤 타워’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

2014년 5월 16일 [논평] 선원수사, 꼬리자르기
아니어야 하

② 정부담론

참사담론(시민단체) - 정부책임(시민단체, 정부) - 사고 담론

사고 담론은 정부가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구성한 참사 담론의 대항담론으로 구성된 담론이다. 사고 담론은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구성한 참사담론에서 정부가 책임담론을 탈접합시킴으로써 재구성된 담론이다. 세월호 침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참사 담론에 대해 공중들이 지지를 보내자, 정부는 참사담론을 사고 담론으로 재구성해 세월호 침몰 사건이 ‘참사’로 사회적 의미가 고착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특히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구성한 참사담론의 헤게모니가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한 담론이다. 이후 두 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승리하자 공론장에서 책임담론과 참사담론의 헤게모니가 사고담론으로 기울면서, 사고담론은 세월호 침몰 사건을 규정해 갔고, 정부는 이후 보상담론으로 PR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헤게모니를 공고하게 구축해갔다. 정부의 사고담론의 헤게모니를 형성한 것은 담론 자체의 경쟁력보다는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상황적 맥락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

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 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18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 中

원인책임 규명기

① 유가족·시민단체 담론

진상규명(시민단체, 진보언론) + 수사 기소권(시민단체, 진보언론) → 특별법 담론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구조 수습기의 참사 담론과 진상규명 담론을 통해 헤게모니를 얻게 되면서, 이를 이어가기 위해 수사·기소권 담론을 접합시켜 특별법을 담론을 재구성해 사회적 실천으로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했다. PR주체로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특별법 담론을 형성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서명 운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PR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펴나갔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유가족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세월호 침몰 사건이 정치 쟁점화되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의 정치 쟁점화는 공중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과 결합되어 특별법 담론의 헤게모니를 잃게 만들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정부 PR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담론이었던 보상담론에게 헤게모니를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PR주체인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특별법 담론이 이전 시기의 참사 담론의 헤게

모니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은 특별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현안으로 옮겨가면서 정치 쟁점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16특별법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가능한 특별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청와대까지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에 불응할 때 사법적 권한으로 조사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이 드러날 때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합니다.

2014년 7월 7일 [가족대책위기자회견] 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 주십시오 中

② 정부담론

사고담론(정부, 보수언론) + 유병언 처벌(정부, 보수언론) → 보상 담론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재구성한 특별법 담론의 헤게모니에 도전하기 위해 사고 담론에 유병언처벌 담론을 접합시켜 보상담론 구성했다. 정부가 제기한 보상 담론은 세월호 침몰 사건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과 실소유자인 유병언의 과실을 묻고 유병언의 재산을 환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내러티브를 담고 있는데, 보상담론은 공론장에서 여론의 관심을 모으면서 헤게모니를 확보해갔다. 보상담론의 헤게모

니를 공고히 한 사건은 사고 담론의 경우에서와 같은 여당이 승리한 선거 결과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선거 이전에는 보상담론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못했지만, 7·30 재보궐 선거의 압승으로 보상담론으로 적극적인 PR커뮤니케이션을 펼치면서 이전에 참사담론과 진상규명 담론에서 열세였던 헤게모니 구도를 재편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의 PR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축된 보상담론의 헤게모니는 보상을 거부하는 유가족들을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하는 집단으로 폄하시키기도 하면서 공론장에서 유가족들의 PR커뮤니케이션을 위축시켰다.

세월호 사고의 국가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 방침을 세웠는데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병언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희생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경제 수석은 보험금과 보상금 지급 문제, 복지 수석은 국민연금 배분 문제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나 마찰이 없도록 잘 마무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30일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중
대통령 발언 中

가 구성한 유병언 처벌 담론에 시민단체가 구성한 꼬리자르기 담론을 접합시켜 책임회피 담론을 구성했다. 도피 중인 유병언 검거로 공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정부와 이를 부추기는 언론을 비판하면서 책임자 처벌 대상이 세월호 선장과 해경의 일선 담당자들 선에서 매듭짓는 것을 경계했다. 꼬리자르기에 그치는 검찰 수사가 참사-땀질처방-참사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2 학생들이 희생된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가 그랬다... 학생 1인당 드는 비용 5000원을 아끼려고 비인가 캠프업체에 하청을 준 유스호스텔 대표, 비용절감을 위해 무자격자를 고용한 업체는 유병언을 닮았다... 유족들은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로 본질을 벗어난 진상규명과 ‘꼬리자르기’에 그치는 책임자 처벌을 들었다. 대구 지하철 유족은... “근본적인 책임은 불에 타지 않는 전동차를 만들지 않은 국가기관... 이를 운행하도록 허기한 중앙정부 등”이라고 지적했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땀질 처방만 해온 것이다.

2014년 6월 25일 .[사설] ‘참사-땀질처방-참사’의 악순환 끊어야 中

③ 진보언론 담론

유병언 처벌(정부, 보수언론) + 꼬리자르기(시민단체)
→ 책임회피 담론

진보 언론은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물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진보 언론은 정부

④ 보수언론

해경무책임(정부, 보수언론) + 검경무능(정부, 보수언론)
→ 무너진 공조직 담론

보수 언론은 해경 무책임 담론과 검경무능 담론을 접합시켜 무너진 공조직 담론을 구성해 무능한 공

무원 사회를 비판했다. 침몰한 세월호의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해경의 비위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검찰이 모든 공조직을 동원하고도 눈앞에서 유병언을 놓친 것을 보면서 공조직의 무능이 끝이 보이지 않음을 개탄했다. 진보언론이 정부의 유병언 여론몰이와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비판한 반면, 보수 언론은 유병언을 놓친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해경 실무자들의 비위 사실에 집중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로 향하는 비난을 분산시켰다.

검경이 11일 금수원에 진입하고도 유씨와 그의 장남 대균씨, 이들 부자(父子) 도피 지원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여신도 2명 등 핵심 인물을 검거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범인 검거를 거듭 촉구했는데도 성과를 못 낸다면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검찰은 물론 청와대에까지 그 부담이 돌아가게 될 수 있다.

2014년 6월 12일 [사설] 또 허탕친 유병언 체포, '공조직 無能'의 끝은 어디인가 中

관제센터 직원들은 세월호 사고 사흘 뒤엔 관제실 내부 CCTV 촬영 기록을 삭제했다...직원들은 처음에는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켰다”, “CCTV가 고장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이 CCTV 기록을 복원해 보니 관제석 의자 2개 가운데 1개가 책상 밑으로 들어가 있었다. 직원들은 그제야 잘못을 실토했다고 한다.

2014년 7월 5일 [사설] 진도 海警 관제센터 '제멋대로 근무'로 세월호 18분 놓쳤다 中

사후대책기

① 유가족 · 시민단체 담론

진상규명(시민단체, 진보언론) + 공동체속죄(보수, 진보언론)
→ 기억 담론

PR주체로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세월호 침몰 직후 공중의 지지를 받았던 진상규명 담론과 공동체 속죄 담론의 헤게모니가 사고 담론과 보상 담론의 헤게모니로 재편되어 가자, 이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진상규명 담론과 공동체 속죄 담론을 접합시켜 기억담론을 재구성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기억담론을 중심으로 ‘416 약속 지킴이’ 캠페인과 광화문 광장의 집회 등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망각을 저지하기 위한 PR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벌였지만, 진상규명 담론과 공동체속죄 담론의 헤게모니는 이미 약화되었고, 약화된 두 담론의 접합을 통해 재구성된 기억 담론의 영향력은 확대되지 못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잡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의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월호 가족들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안전사회, 함께 규명하는 세월호의 진실, 그 길에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겠습니다.

2014년 8월 4일 <기자회견문> 우리 모두가 세월호 가족입니다 中

국민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잡은 손 맞잡고 끝까지 전진해 나갈 그런 굳은 다짐이 될 약속을 하자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실과 안전을 국민의 힘으로 추진하기 위한 ‘416 약속지

김이'에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2014년 10월 21일 [기자회견] 세월호 '416
약속지킴이'가 되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中

2014년 9월 16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성명
대통령의 세월호 진상규명 정면 거부 발언을
규탄한다! 中

② 정부 답론

수사 기소권(시민단체, 진보언론) - 선동(보수언론) → 순수
답론

정부가 구성한 순수답론은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구성한 수사권·기소권 답론에 색깔론을 접합시킨
답론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에 대
한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
는 보수언론이 제기한 정치적 선동 답론을 접합시
켜 순수 유가족과 순수하지 않은 유가족으로 나누
는 순수 답론을 구성했다. 순수 답론은 유가족과 시
민단체를 내적 분할하고, 공론장에서 유가족을 지
지하는 공중과 시민단체를 공격하면서 유가족과
공중과의 연대에 균열을 일으켰다(Kim, 2014). 유
가족과 공중과의 분열을 일으키면서 순수 답론은
기억답론에 대응해 공중의 지지를 얻으면서 헤게
모니를 얻어갔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진
상조사위에 대한 수사·기소권 부여 문제를 “삼권분
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거부했고, 유족
에 의해 거부되어 무산된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
안을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라며 강조했으며...
심지어 대통령은 “순수한 유가족의 마음”, “외부세
력의 정치적 이용”을 운운하며 유가족들과 국민들
의 진상규명 요구를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③ 진보언론 답론

反수사 기소권(정부) + 불통(시민단체) → 세월호 표류 답론

세월호 표류 답론은 진상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과 유가족
과 대화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접합시
킨 답론이다. 진보언론은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지 않는 이유를 청와대의 눈치를 보기 때문
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대
화 요구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청와대를 비판
했다. 세월호표류 답론은 4개월이 지나도 진상규
명의 첫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정치권의 직무무기
를 지적하고 특별법을 제안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
구한 답론이다.

새누리당이 한사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막는
속사정이 사실은 ‘박 대통령 보호’에 있음은 세상아
이는 일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아리송한 행적 등이 낱알이
파헤쳐져 박 대통령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박 대통령은 책임을 국회
에 떠넘기고,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2014년 8월 24일 [사설] 박 대통령, 유족 만나기가
그토록 어려운가 中

Table 4 Discourse Practices

| | Bereaved Families/Civic Organizations | Government | Progressive Media | Conservative Media |
|-------------------------------------|---|--|--|---|
| Rescue Period | <Tail Cropping Discourse> : Truth Ascertainment (C, P) -Government's Responsibility (C, G) | <Accident Discourse> : Disaster (C) - Government's Responsibility (C,G) | <Tail Cropping Discourse> : Truth ascertainment (C, P) -Government's Responsibility (C, G) | <Accident Discourse> : Disaster (C) - Government's Responsibility(C,G) |
| Investigation Responsibility Period | <Special law Discourse> : Truth Ascertainment (C, P) +Rights of Accusation and Investigation (C, P) | < Compensation Discourse> : Accident(G,CM) + Punishment on Yoo Byung-eun (G,CM) | <Responsibility Avoidance Discourse> : Punishment on Yoo Byung-eun(G,CM) +Tail cropping (C) | <Collapsing Government Offices Discourse> : Irresponsibilities of the Cost Guard (G, CM) + Incapabilities of Prosecutor (G, CM) |
| Counter-measure period | <Remembrance Discourse> : Safe Society (C, P) +Community's Atonement (CM,P) | <Purity Discourse> : Rights of Accusation and Investigation (C, P) -Political Instigation (CM) | <Drifting special law Discourse> : Anti-Rights of Accusation and Investigation (G) +miscommunication (C) | <Fatigue Discourse> : Conflict(CM) +Economy(G) |

***C (Civic Organizations), G(Government), P(Progressive Media), CM(Conservative Media)

④ 보수언론 담론

갈등(보수언론) + 경제(정부) → 피로감 담론

5월 22일 전국 8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발족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과 대규모 촛불 집회를 조직하기 시작하자 보수 언론은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연대에서 정치적 세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치적 선동 담론으로 시민연대를 경계했다. 특별법 합의를 난항을 거듭하자 보수언론은 정치권과 유가족의 갈등을 비판한 갈등담론과 정부의 경제 살리기 담론을 접합시켜 세월호 피로감 담론을 구성했다. 정부의 순수 담론과 피로감 담론의 연합은 세월호를 종결하고자 하는 보수층의 결집을 얻어냈다. 동시에 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별법을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을 시민들과 분리시키면서 사후대책기 담론 경쟁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해갔다. 사후대책기 담론 경쟁에서 헤게모니를 얻은 담론은 선동 담론과 경제담론을 접합한 담론들로, 공론의 장에서 색깔론과 경제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월호 특별법 갈등으로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제 피로감 수준에서 불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시장에 붙여놓은 노란 현수막 때문에 상인들과 충돌 직전이다”, “세월호 유족 아닌 다른 국민은 국민도 아니냐”...는 게 의원들이 전한 솔직한 추석 민심이다. 한 의원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이라고 한다. 표현 수위가 높아서 놀랐다. 다들 세월호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2014년 9월 10일 [사설] ‘세월호’에 진저리 치고, 국회는 해산하라는 추석 민심 中

세월호 침몰을 둘러싼 담론 경쟁의 논증구조는 어떠한가, 이데올로기 경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참사담론과 사고담론의 경쟁 : 진보와 보수주의 대립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PR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주체인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구성한 참사 담론과 사고 담론의 근거는 동일하다. 그러나 논거에서 밝힌 300여 명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참사담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하는 헌법상 의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비판하는 PR 커뮤니케이션을 했다. 반면 정부는 사고담론을 통해 국가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경의 무능으로 방어했고, 안전의 민영화를 잘못된 증개축, 화물의 과적, 안전관리 소홀 등 개별기업의 과실로 축소시키는 PR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참사담론이 정치와 경제체제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 이데올로기에 기인한 반면 정부의 사고담론은 참사담론이 제기한 체제와 제도의 개혁보다는 유지를 통해 비판받는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보수 이데올로기가 발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민단체와 유가족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참사 담론의 PR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갔고, 공중들은 참사 담론이 겨냥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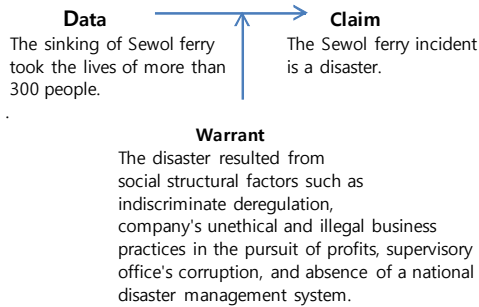


Figure 2 Argument Structure of the Disaster Dis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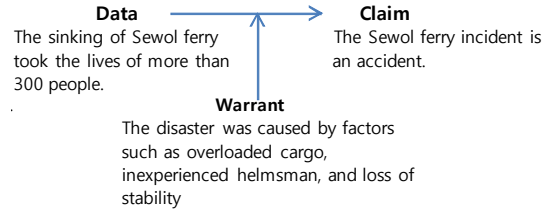


Figure 3 Argument Structure of the Accident Discourse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와 공적 서비스를 사적 서비스로 전환시켜버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비판에 동조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벌인 특별법 서명 캠페인에 350만 시민이 지지를 모아 특별법 제정이 신청되었고, 세월호 침몰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발언한 KBS 국장이 여론의 못매를 맞고 사임되는 등 진보주의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가 확대되어 갔다.

진상규명담론과 보상담론 : 사회적 정의와 과실책임주의 대립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엮어낸 진상규명 담론 논거에는 검찰의 수사만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 드러나 있다. 가해자,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조직과 구조에 대한 넓은 범위의 사회적 처벌을 집행할 수 있어야 사회적 정의를 회복하고 안전사회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가해행위의 책임을 밝히는 형사법과 달리 처벌되지 않는 영역, 즉 사법적 진실로 밝혀낼 수 없는 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정의

수립을 추구한다(Kang, 2014). 반면, 정부는 사고담론의 연장선에서 보상 담론을 제기했다. 보상담론은 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해 세월호 침몰 사건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가 보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정의에 기댄 진상규명 담론을 통한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PR커뮤니케이션은 담론의 정당성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지만, 보상을 거부하는 유가족에 대한 특혜시비와 진정성 논란 등으로 발생한 공중들과의 연대에 균열을 막아 내지 못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참사 담론을 통해 구축했던 헤게모니는 정부의 보상 담론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담론 자체의 경쟁력으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 보상을 둘러싼 사회의 편견 그리고 과실책임주의 수용하는 계층의 자기 정당화 욕구가 초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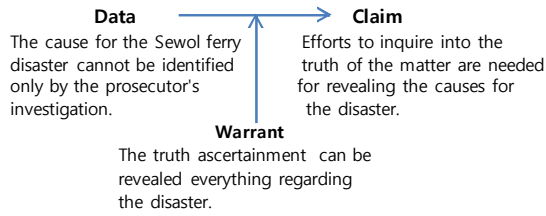


Figure 4 Argument Structure of the Truth ascertainment Dis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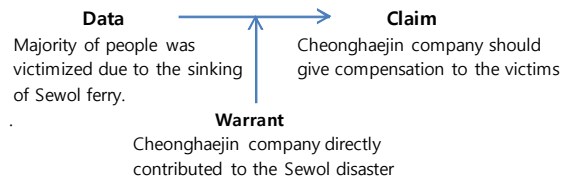


Figure 5 Argument Structure of the Compensation Discourse

기억담론과 피로감 담론 :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대립

보수 언론은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갈등을 불경기의 원인으로 간주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세월호 피로감에 쌓여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언론이 구성한 피로감 담론에는 시민적 의무와 공동선보다는 경제적 이익과 개인의 권리가 앞세워지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이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기억담론을 통해 세월호 침몰 사건을 개인, 국가, 공동체가 풀어야할 공적 사건(Cho, 2014)임을 환기시키는 PR커뮤니케이션을 벌였다. 시민단체와 유가족은 세월호 침몰이 유족만의 비극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을 흔든 참사로 인식해야한다는 공공성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동체주의의 기억 담론과 자유주의의 피로감 담론의 경쟁은 정부와 대립하는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정치적 선동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색깔 논쟁으로 훼손되었다. 색깔론은 이데올로기에 특정 색을 덧입힘으로써 이념이나 정치적 주장의 정당성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하며(Hong, 2002), 공론장의 정당한 담론 경쟁을 훼손시켰다. 보수 언론의 피로감 담론과 일부 시민단체의 색깔론 공격은 공론장에서 세월호 침몰 사건 담론 경쟁을 종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론

PR 커뮤니케이션의 담론 경쟁 접근에서는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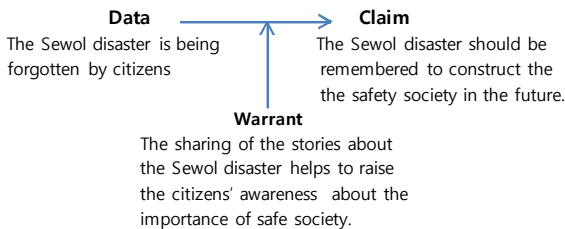


Figure 6 Argument Structure of the Remembrance Discou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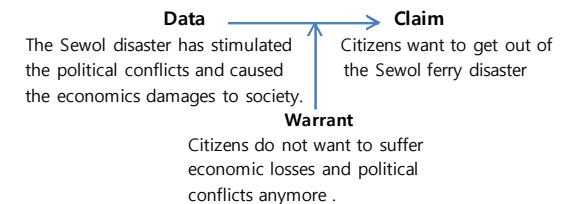


Figure 7 Argument Structure of the Fatigue Discourse

Table5 Discursive Struggles

| Period | Division | Discursive Struggles | |
|---|-----------|---|---------------------------------|
| Rescue Period | Discourse | Disaster | Accident |
| | Subject | Citizen organization / Progressive media | Government / Progressive media |
| | Ideology | Progressivism | Conservatism |
| Investi- -gation Respon- -sibility Period | Discourse | Truth ascertainment | Compensation |
| | Subject | Bereaved families, Citizens / Progressive media | Government / Progressive media |
| | Ideology | Social justice | Individual negligence liability |
| Counter- -measures Period | Discourse | Remembrance | Fatigue |
| | Subject | Bereaved families, Citizens / Progressive media | Conservative media |
| | Ideology | Communitarianism | Liberalism |

지지를 받는 담론이 현실을 정의한다. 따라서 담론의 헤게모니는 의미 공유를 이끌어 내는 창의성에 의해 이동될 수 있다. 담론 경쟁에서 권력의 가변적 속성은 조직 중심의 PR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힘의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준다. 뿐만 아니라 분석 단위를 조직 중심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공론의 장 형성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Taylor, 2010).

이 연구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둘러싼 PR 커뮤니케이션의 담론 경쟁을 비판적 담론분석을 적용해 분석했다. PR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서 유가족과 시민단체, 정부, 진보 언론, 그리고 보수 언론이 구성한 담론들 중 적극적인 담론적 실천을 보인 담론은 유가족과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언론의 진상규명 담론이었다. 진상규명 담론은 다른 담론들과의 접합을 통해 꼬리자르기, 특별법 담론, 기억 담

론으로 담론적 실천을 이어갔다. 결국 유가족과 시민단체 그리고 진보 언론은 세월호 침몰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진상규명을 통해 공유하고자 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원인책임규명기에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진상규명 담론 PR 커뮤니케이션은 정부의 보상 담론 PR 커뮤니케이션과 경쟁하며 사법적 진실로 밝힐 수 없는 구조와 역사를 밝히고자 했다. 유가족은 보상이 아닌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이라는 논란에 부딪혔고 여론은 진상규명보다 유병언 처벌에 더 관심을 보였다. 담론의 사회적 정당성 측면에서 진상규명 담론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담론의 대응을 막아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전 시기 참사담론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보상담론에게 헤게모니를 넘겨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헤게모니 구도는 기억 담론과 피로감 담론 경쟁에서 더 고착화되었다. 사후 대책기 보수언론은 선제적으로 피로감 담론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공공가치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안전사회에 대한 염원을 이어가자는 기억 담론으로 대항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기억 담론은 보수 언론이 구성한 피로감 담론과 경쟁하면서 선동 세력이라는 색깔론의 공격까지 받으면서 담론의 헤게모니를 잃어갔다. 분석기간 총 216일 동안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둘러싸고 경쟁한 참사와 사고, 진상규명과 보상, 그리고 기억과 피로감 담론 간의 경쟁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 사회적 책임주의와 과실책임주의,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들의 스펙트럼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담론 경쟁 패러다임을 통해 세월호 침몰 사건을 분석한 결과, PR 주체로서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담론이 헤게모니를 구축할 수 있었던 담론들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담론이었고, 반면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담론이 헤게모니를 잃어버리는 상황적 요인으로는 이 PR주체의 담론이 정치 쟁점화 되는 사회적 맥락이었다. 특별법이 정치 쟁점화 되면서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참사담론의 헤게모니를 이어가지 못했고, 정부의 사고 담론과 보상 담론으로 공중의 지지가 기울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적 맥락에서 PR주체로서 정부는 경제 담론이 개입된 보상담론으로 더욱 공고히 헤게모니를 구축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이 제기한 피로감 담론도 선동담론과 정부의 경제 살리기 담론이 접합된 것으로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둘러싼 PR주체들 간의 담론 경쟁에서 경제담론의 영향력이 컸

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창조적 담론 실천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PR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의 담론 기술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담론 기술자란 담론의 경쟁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담론을 사용해서 주어진 진실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진실을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에 의미를 두며 사회 현실을 재구성하는 PR커뮤니케이션 담당자를 뜻한다 (Motion & Leitch, 1996). 담론 경쟁에서 PR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은 담론 참여자들의 담론적 실천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담론적 실천을 이어가면서 담론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실제 경쟁에 적용시키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PR 커뮤니케이션은 공중들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며 기존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기존 권력과 대항해 담론의 경쟁을 벌여 합의를 위한 공론장을 확장시키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담론 경쟁 패러다임을 통해 PR커뮤니케이션의 조직 중심 접근에서 객체화되었던 공중이 담론을 매개로 PR커뮤니케이션이 주체가 되어 공중들과의 의미 공유를 형성해 헤게모니를 얻어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런 배경에서 담론의 능동성을 통해 조직 중심 PR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로 지적되는 권력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논의했다. 그러나 담론 경쟁 패러다임을 통한 PR 커뮤니케이션 주체와 주제의 확장이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논의되기보다 당위적 차원의 주장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이론과 분석틀이 보다 긴밀히 조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Burke, K. (1969). *A grammar of motiv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urke, K. (1973). *The philosophy of literary form (3rd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o, H. J. (2014.10). Condolences, for the social catharsis and time and space.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f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 Fairclough, 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UK: Polity Press.
- Fairclough, N. (1993).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the marketization of public discourse: The Universities. *Discourse Society, 4*(2), 133~168.
- Fairclough, N. (1995).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Longman.
- Fairclough, 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Routledge.
- Gordon, J., & Pellegrin, P. (2008). Social constructionism and public relations. In T. L. Hansen-Horn & B. D. Neff (Eds.), *Public relations: From theory to practice*(pp.104~121). Boston: Pearson.
- Gramsci, A. (1999). *Selection from the Prison Notebooks*. (Q. Hoare, & G. Nowell-Smith, Eds. and Trans.). London: Lawrence & Wishart. (Original work published 1971).
- Hamilliton, P. (1992). The enlightenment and the birth of social science. In S. Hall & B. Gieben(Eds.), *Formations of modernity*(pp.17~69). Cambridge, UK : Polity Press.
- Hall, S.(1996). On postmodernism and articulation : An interview with Stuart Hall, In D. Morley & K. Chen (Eds.), *Stuart Hall: Critical dialogues in cultural studies* (pp.131~150). London: New York : Routledge.
- Halliday, M. A. K.(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London: Edward Arnold.
- Heath, R. L. (2001). A rhetorical enactment rationale for public relations: The good organization communicating well. In R. L. Heath(ed.), *Handbook of public relations* (pp.31~50). Thousand Oaks, CA: Sage.
- Heath, R. L. (2006). Onward into more fog: Thoughts on public relations' research direc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8*, 93~114.
- Heath, R. L., Motion, J., & Leitch, D.(2010). Power and public relations. In R. L. Heath(Ed.), *The sage handbook of public relations*(pp.191~204). Thousand Oaks, CA: Sage.
- Hong, Y. G. (2002). The Operation of 'progressive - conservative - relation' as discursive practice in the democratic sphere of public opinion and its Korean situation. *Society and Philosophy, 3*, 15~50.
- Kang, S. H. (2014). Issues and criticism of the "reconstruction of truth" about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past events. *Critical Review of History, 109*, 62~93.
- Kim, B .S., & Kim, J. I. (2014). Reinterpretation of government officials' responsibilitie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8*(3), 99~120.
- Kim, H. Y., & Kang, B. B. (2011). Lexical features in editorial texts : A keyword analysis based on a 2009 newspaper corpus. *Discourse and Cognition, 18*(3), 89~113.
- Kim, J, S. (2015). Constitutional tasks left behind the Sewol Ferry case. *Justice, 146*(3), 282~318.
- Kim, J, Y. (2014). Between understanding and ideology - Some considerations on Sewol disaster. *Economy and Society, 104*, 81~111.
- Kim, K. Y. (1994). *What is semiotics?*. Seoul : Minumsa.
- Kim, S. A. (2014). *Does the history flow?*. Paper presented at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symposium. Seoul: Yonsei University.
- Kim, Y. W. (2012). Public relations as discourse struggles: A new paradigm and setting the direction of theory development. *Communication Theories, 8*(1),

352~385.

- Kristeva, J. (1986). Word, dialogue and novel. In T. Moi (Ed), *The kristeva reader*(pp.34~61). Oxford: Basil Blackwell.
- Lee, B. J. (2003). Re-reading of Toulmin's "The Use of Argument" through Peirce's semiotics and Laclau & Zizek's discourse theory. *Speech and Communication, 2*, 108~148.
- Lee, G. H., & Koh, H. S. (2009). Korean newspaper's political orientation featuring in US beef imports articles : Analysis of source information valence in five newspap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3), 347~369.
- Lee, S. P. (1995). A Case study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 Government learnings in urban disaste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29*(3), 1335~1361.
- Leitch, S., & Neilson, D. (2001). Bringing publics into public relations: New theoretical frameworks for practice. In R. L. Heath.(Ed.), *Handbook of public relations* (pp. 127~138). California : Sage Publications.
- Leitch, D., & Motion, J. (2010). Publics and public relations: Effecting change. In R. L. Heath(Ed.), *The Sage Handbook of Public Relations*(pp. 99~110). Thousand Oaks, CA: Sage.
- Livesey, S. (2001). Eco-Identity as discursive struggle: Royal Dutch/ Shell, Brent Spar, and Nigeria.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38*(1), 58~91.
- Oh, Y. S., & Ko, C. T. (2009). A Study upon structures of policy argumenta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1*(1), 287~312.
- Oh, H. Y. (2007). Modern literary criticism and rhetoric of argument. *Journal of Language and Literature, 56*, 325~362.
- Park J. H. (2015). The Politicization of disaster. Paper presented at the first anniversary symposium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 Park, J. W. (2014). *The meaning and content about victims' special law*. Paper presented at presentation of the special law for truth ascertainment and the constructing safe society, National Assembly.
- Park, S. H. (2006). Rhetorical analysis of news editorials on 'screen quota' arguments: An application of Toulmin's argument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36*, 399~422.
- Perelman, C. & Olbrechts-Tyteca, L.(1969). *The New rhetoric: A treatise on argumentation*. (J. Wilkinson & P. Weaver, Tran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58).
- Rho, J. C. (2015). The Failure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and its structural causes.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11*(3), 1~17.
- Roper, J. (2005). Symmetrical communication: Excellent public relations or a strategy for hegemony?.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17*(1), 69~86.
- Shin, J. W. (2011).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critical-emancipatory science. *Economy and Society, 89*, 10~45.
- Toulmin, S.(1958). *The uses of argument*. Cambridge : University Press.
- Toulmin, S, Rieke, R., & Janik, A. (1984). *An introduction to reasoning (2nd ed.)*. New York: Macmillan.
- van Dijk, T. A. (1993). Principle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 Society, 4*, 249~283.
- Online
National Countermeasure Committee of Sewol Disaster, sewolho416.org
- News articles
KBS (2014.11.2.). Victims' Family Committee accepts the parties' negotiations on the Sewol Special Law.
NocutNews (2014.8.29.). People are disappointed

National Assembly investigation to government.

최초 투고일 2015년 06월 08일

논문 심사일 2015년 06월 29일

논문 수정일 2015년 09월 04일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02일

Was the Sewol Ferry Case a Disaster or an Accident?

An Application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Yungwook Kim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Seungkyung Ham

Doctoral Student, School of Communication & Media, Ewha Womans University***

A discourse struggles paradigm extends the analysis unit of PR communication to include social issues beyond the organization and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field of public discussions through the discourse struggles among various social agents, while giving consideration to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is study analyzed the Sewol ferry case with the discourse struggles as a framework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discourse that formed aggressive discourse practices is the one about the fact-finding investigations of bereaved families and civic groups, which got to form the meaning of the Sewol ferry case, while being reconstructed as tail cropping, special law and remembrance discourses. The competing discourses by period are also investigated. In the rescue period, the disaster discourse configured by bereaved families, civic groups and progressive media competed against the accident discourse produced by government and conservative media. In the responsibility investigation period, the discourse about the truth ascertainment of bereaved families, civic groups and progressive media competed with the discourse about the compensation of government and conservative media. And lastly, in the countermeasures period, the heated struggles continued between the discourse about the remembrance of bereaved families/civic groups and the one about the fatigue of the conservative media to obtain social support. At first, citizens who were shocked at the Sewol ferry case supported the disaster discourse of bereaved families who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4S1A3A2038236)

** Corresponding Author: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03760. kimyw@ewha.ac.kr, 82-2-3277-2237

*** Second Author: hamseungkyung@gmail.com

claimed the reformation with progressive ideologies. However, with the passage of time, they came to embrace the ideologies of individualism and negligence liability principles of the compensation and fatigue discourses, and therefore the center of hegemony was moved to the discourse of the government and conservative media.

KEYWORDS Sewol ferry, CDA, Discourse Struggles, Disaster, Accident